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1116-13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2026

2025

2024

2023

2022



Contents

I. 의의	7
II. 추진경과	11
III.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평가	1.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이념 및 기본시책 5 2. 주요 추진성과 6 3. 한계 및 향후 과제 7
IV.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개요	1. 수립 방향 33 2. 비전과 목표 35 3. 제4차 기본계획의 구조 66
V.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1.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9 2.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3 3. 형사절차 참여 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1 4.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6 5.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4
VI. 제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추진 부처	103

I . 의의



I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의의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둔다.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부처(청) : 9개 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 및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설계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 연도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
- 중장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준 제시

Ⅱ. 추진경과



II. 추진 경과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발표(’04. 9.)

-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안) 및 ‘피해자구조기금’ 설립 계획(안) 등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05. 12. 23.) 및 시행(’06. 3. 24.)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책무 규정
-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심의기구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규정

■ 제1차(’07~’1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5가지 정책영역* 및 15개 정책과제, 90개 세부과제 선정 및 시행

* ① 손실복구 지원, ② 형사절차 참여보장, ③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④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 ⑤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운용

■ 제2차(’12~’1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3가지 정책영역** 및 9개 정책과제, 39개 세부과제 선정 및 시행

** ① 손실복구 지원, ② 형사절차 참여보장, ③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 제3차(’17~’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5가지 정책영역*** 및 13개 정책과제, 68개 세부과제 선정 및 시행

*** ① 피해회복 지원, ② 피해 배상과 국가 구조 강화, ③ 형사절차 참여권리 보장, ④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안전, ⑤ 정책추진 체계 정비 및 강화

■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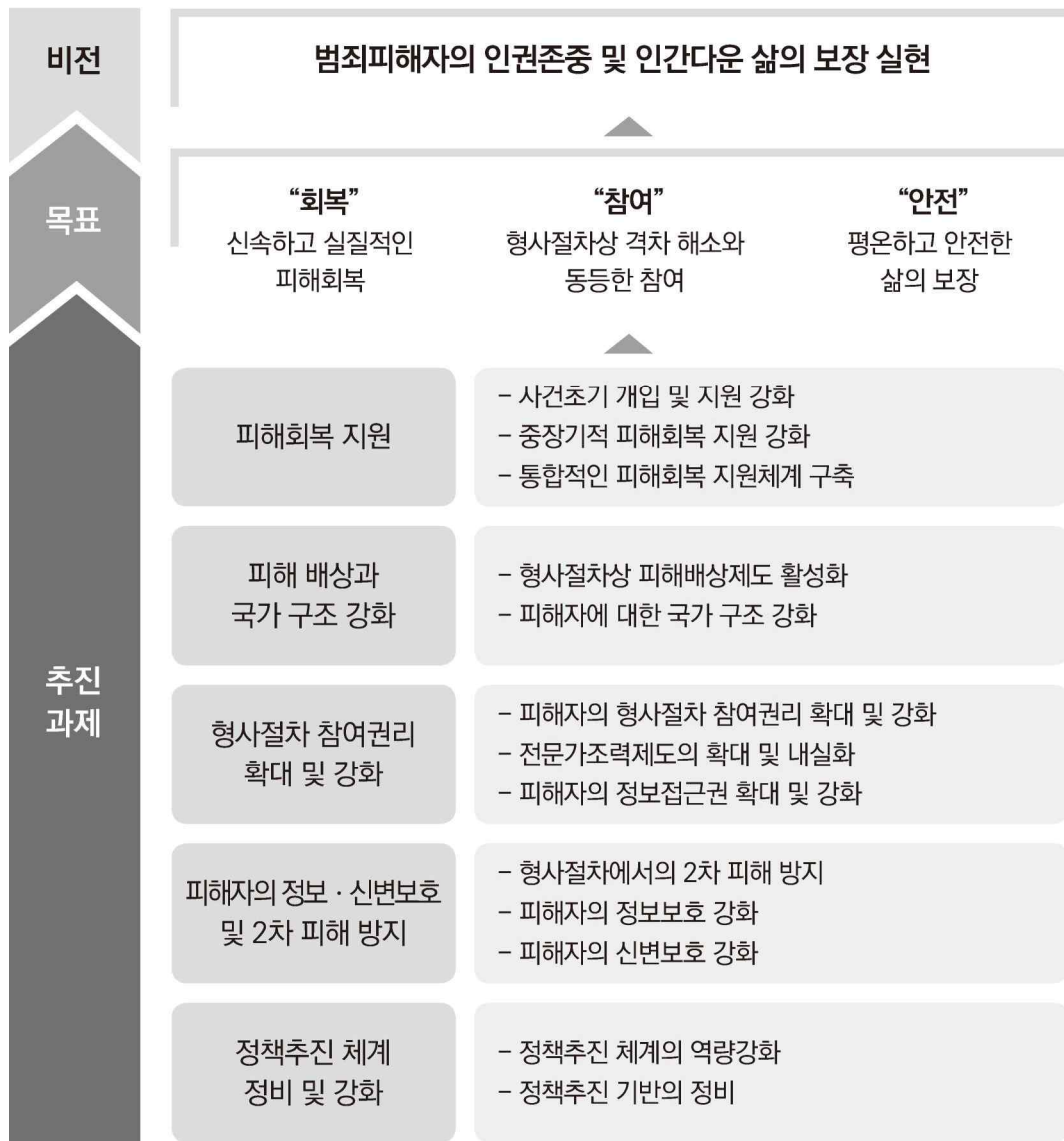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21. 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별 제3차 기본계획의 이행성과 평가 및 신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21. 3.~6. 총 18회)
 - ※ 경찰, 검사, 판사,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법원 증인지원관 총괄 담당자, 신문기자, 대학교수,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 및 실무자 67명 참여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분야 별 현황분석 및 진단과 제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초안 집필('21. 6.)
 - ※ 총 12명이 집필진으로 참여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검토를 위한 서면 자문회의 개최('21. 6.~7.)
 - ※ 판사, 변호사, 경찰, 대학교수,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종사자 등 총 16명 참여

Ⅲ.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기본계획 평가



Ⅲ.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평가

1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이념 및 기본시책



2 주요 추진성과

2-1. 피해회복 지원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사건초기 개입 및 지원 강화
- 중·장기적 피해회복 지원 강화
- 통합적인 피해회복 지원 체계 구축

주요 추진성과

- 피해자전담경찰관 및 위기개입상담관 배치를 통한 초기 지원 강화
 - 경찰에서는 심리학 전공자를 경찰으로 157명을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여 각 경찰서에 1명씩 배치, 범죄발생 초기단계부터 밀착 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 심리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위기개입상담관(일반임기제 공무원)을 43명 시도경찰청에 배치
- 범죄피해자 지원담당관 배치를 통한 피해영향진술서 및 양형조사
 - 대검찰청에서는 '17년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지원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One-Stop 지원 절차인 「범죄피해 수사·양형 반영 방안(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시행
-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
 - 법무부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전국 16개 광역 단위로 확대, 지원실적이 '17년 62,388건에서 '19년 74,566건으로 연평균 9% 증가

※ 스마일센터 설치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규 설치 개수	1	2	1	2
설치 지역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제주, 목포
누적 개소 수	11	13	14	16
지원 건수*	62,388	77,001	74,556	66,993

* 심리지원, 사회지원(외부기관 연계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지원 건수 포함

- 대검찰청에서는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학회 및 피해자지원 단체 소속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발족 및 업무협약 체결, 「범죄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매뉴얼」에 따라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증액

- '17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예: 주거침입죄, 디지털 성범죄 등)라고 인정되는 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17년 13세 미만의 범죄피해 아동과 강력범죄 피해 가정 자녀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비용 신설(최대 6개월, 300만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13세 미만 형제자매에게까지 돌봄 비용 지원을 확대
- '18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범위에 출산치료비를 포함하는 등 경제적 지원 대상 및 지원 영역 지속적으로 확대
- '17년 강력범죄 피해자 간병비·요양치료비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19년 장례비 지원 금액 상향 조정
 - ※ '17년 간병비 : 1,200만원 → 1,500만원, 요양치료비 : 3,000만원 → 5,000만원
 - ※ '19년 장례비 300만원 → 400만원
 - ※ 경제적 지원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합계
2017	건	735	347	381	105	168	1,736
	금액	2,378,265	186,029	732,650	150,322	476,614	3,923,880
2018	건	744	472	319	87	175	1,797
	금액	2,603,161	255,876	676,816	109,040	507,366	4,152,259
2019	건	773	434	306	90	205	1,808
	금액	2,617,162	249,268	594,457	99,037	733,400	4,293,324
2020	건	632	387	302	68	167	1,556
	금액	2,004,767	149,880	598,040	77,200	615,897	3,445,784

• '19년 대검 지침 개정으로 경제적 지원의 신속성 확보

- 경찰 등의 추천에 의하는 경우, 이미 추천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추천기관이 추천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공소장, 판결문 등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의 제출부담 완화 등 제출 서류 간소화
- ※ '19. 10. 부터 범죄피해구조금·경제적 지원 신청시 개별기관(주민센터, 국세청 등)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위해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권한을 취득하여 증빙서류를 직접 확보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 피해자지원 담당자의 경제적 지원 접수 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동시에 위원장이 우선 긴급성을 판단하여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하며, 그 중에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평소 생계곤란을 겪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의 생계비, 기타 이에 준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즉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경제적 지원금에 대하여는 절차 개시 즉시 결정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체계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해바라기센터 증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과 지원 실적 증가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2021년 6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
해바라기센터	37	38	39	39	40	39
성폭력 피해 상담소	104	104	104	104	104	10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0	30	31	32	32	34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93	93	103	128	128	128
통합상담소	10	10	20	30	30	3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7	66	66	66	65	65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속적 확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등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계비, 교육비 및 학습지원비 등 지원
- '18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1개소 최초 개소, '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1인 500만원 한도) 신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단기 시설의 경우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20년 소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지원, 인적사항 유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 및 법정동행 등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보호, 심리치료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심리치유 지원
- 생계비, 학자금 지원 등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몸에 흉터를 남긴 피해자의 흉터 제거비용을 치료비로 지급하고, 5주 미만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
- 그 외 AI기반 불법촬영물 탐지시스템으로 불법동영상이 게시된 URL 주소를 특정하여 방심위

및 방통위에 통보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삭제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학대피해 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발생 방지 대책 강화

- '19년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하여 사례관리 강화 및 재학대 예방
- ※ '21년까지 전체 229개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 664명 배치
- 피해아동 전용 심리치료·보호시설 확충, 아동학대 고위험군 발굴 및 재학대 모니터링 강화 사업 전개

※ 학대피해 아동 보호·지원 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건, 개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	29,674	34,169	35,417	38,267	32,980
아동학대 확인 건수	18,700	22,367	24,604	25,766	21,410
아동보호전문기관	59	60	62	67	71
학대피해 아동 쉼터	53	57	65	72	76

• 주거지원(임대주택) 수혜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건수 증가

-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대상 범위를 종전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피해자 등에서 '18년부터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제추행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아동학대 의율 대상 피해자,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20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피해자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건수는 '17년 294호에서 '20년 344호로 증가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임대주택) 실적

('17년) 294호 → ('18년) 314호 → ('19년) 335호 → ('20년) 344호

•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문 제작 언어를 '15년 4개 국어에서 '20년 17개 국어로 확대하고, 통역인력풀 구축 운영(경찰관 950명, 민간인 3,312명)
- '19년 1월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 '19년 4월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피해자이면 경제적 지원 대상에 포함
- '17년 5월부터 법률홈닥터, 마을번호사로 구성된 합동법률지원단이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이주여성 상담소 9개소 신설('19년 5개소, '20년 4개소), 이주여성 보호 시설 '16년 28개소에서 '20년 32개소로 확대
- '18년 12월 구조금 지급 대상을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로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임기만료 폐기로 재추진하여 '20. 11월 제21대 국회 제출

2-2. 피해 배상과 국가의 구조 강화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형사절차상 피해배상제도 활성화
- 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 강화

■ 주요 추진성과

- 구조금 지급 등급 확대 및 기준 완화로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
 - '17년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최저 등급을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척추 기형, 손가락 상실 등도 구조금 지급대상으로 포섭, '18년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에 따라 장해구조금 지급건수가 '17년 21건에서 '19년 34건으로 증가
 - '17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상해구조금 지급요건인 입원치료 필요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 이에 따라 중상해구조금 지급건수는 '17년 57건에서 '19년 86건으로 23% 증가

※ 구조금 유형별 지급건수 및 평균지급액

(단위 : 건, 원)

연도	합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7	264	9,289,429	186	8,014,256	21	854,778	57	420,395
2018	246	10,175,045	186	9,234,467	24	736,133	36	204,445
2019	305	11,516,297	185	9,278,850	34	1,140,317	86	1,097,129

-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급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치 근거규정 마련,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피해자 사망시 지급 대상을 확대해

유족에게 지급

－ '18. 국회 제출 하였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로 '20. 11. 제21대 국회 재발의

• 구조금 지급 대상을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절차 진행

－ 고의 범죄로만 제한되던 구조금 지급 대상을 과실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절차진행 ('21. 6. 25. 입법예고)

2-3.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 전문가 조력제도의 확대 및 내실화
-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주요 추진성과

• 가석방 심사 시 피해자의 가석방 불원 민원 반영

－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피해자가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법무부 (www.moj.go.kr), 검찰청 웹사이트(www.spo.go.kr) 내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항목에서 안내

－ 피해자의 가석방 불원 민원 접수 시 해당 교정기관의 가석방 예비 심사단계에서 반영하여 가석방 불허

※ 피해자의 가석방 불원 민원 반영건수

('17년) 414회 → ('18년) 382회 → ('19년) 205회 → ('20년) 131회

•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 확대

－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이 궁박한 상태에 놓여 성매매한 아동·청소년('19), 청소년성보호법상 모든 피해아동·청소년('20), 아동학대범죄 피해자('21.), 장애인학대 피해자('21.)로 확대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는 '14년부터 지원, '21. 3. 필요적 선정으로 개정

－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17년 17명에서 '20년 23명으로 증원, 해바라기센터 5개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8개소에 배치, 피해자국선변호사에 의한 지원건수는 '17년 19,903건에서 '20년 26,007건으로 연평균 9% 증가

※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건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건수	19,903	22,755	25,459	26,007

•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아동학대범죄의 13세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참고인 및 증인('20.), 장애인학대 피해자('22년 시행 예정)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 다양한 지역기반과 전문성(특히, 장애인대상 진술조력 전문가)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양성하였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술조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근 진술조력인을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배치

※ 진술조력인 ('17년) 82명 → ('20년) '136명 연평균 18% 증가

상근 진술조력인 ('17년) 11명 → ('20년) 16명

• 수사진행상황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법령상 근거 확보

-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수준의 수사진행상황 통지근거 마련('21.)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 이하 '수사준칙)」 제12조,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3호)」 제11조에 수사진행상황 통지 근거 신설

• 사건진행상황에 관한 통지 정보의 추가

- 경찰의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여부, 사건담당자 변경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서 제공하고, 형사사법포털에 수사진행 상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 통지 기능' 추가('17.),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 등을 검찰에 불송치 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 대해 불송치 이유 의무통지 시행(형사소송법 제245조의6)('20.)
- 검찰의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통지의사 확인' 기능('17.)을 신설하였고, 5대강력범죄 구공판시 통지의사 확인 의무화('19.), 가정폭력사범 등에 대한 '임시조치 실효사실 통지'('19.), 배상명령 제도 자동문자통지('20.), 기소중지 재기 시 피해자 자동문자 통지('20.), 고소사건뿐 아니라 인지사건의 경우에도 처분결과 통지('21.) 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수사진행 중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62호)」('17.) 제정과 「수사준칙(대통령령 제31089호)」 및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3호)」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법적 근거 확보('21.)

• 피해자 권리고지 시 피해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대국민 홍보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4.부터 피해자 및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령안심캠페인」을 개최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익영상 '아름다운 동행 제작 및 유튜브 홍보('18.), 지하철 액자광고 및 라디오 광고('19., '20.), 전국 1,000개 병·의원 키오스크 광고('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책자·리플릿 발간 및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배포('21.)』 하였으며, '2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전반을 담은 공식 홈페이지 (www.moj.go.kr/cvs/index.do)를 구축하여 누구든지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 '범죄피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시적으로 범죄피해 지원 관련 제도를 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검찰은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동영상 광고 및 라디오 광고 공모전 개최('19.), 대검찰청 SNS 계정 및 유튜브 채널 신설하여 피해자지원 제도에 대한 알람자료 등 홍보('19.),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일선 청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20.), 16개 언어로 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지원 리플릿 제작 후 각국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19.-'20.)
-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기능별 권리고지에 관한 내용 보충 및 피해자 안내문 정비('18.),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에 있는 법률용어 순화 및 담당 수사관 및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내용 수정('19.), 형사절차 단계별로 삽화와 사례별 Q/A 포함된 표준 안내서 제작('17.)

2-4.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안전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주요 추진성과

-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차단하는 시설 확충 및 제도 운영
 - 수사단계에서 수사와 조사 공간 분리, 영상녹화실조사실 확충, 성폭력사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영상녹화 시행
 - 재판단계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위해 증인지원관 증원, 특별증인지원실 확충(의성지원 제외 전국법원 설치 완료). 특별증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범죄피해자 등으로 증인신문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취약증인'으로 선별하여 특별증인에 준하는 지원 제공

※ 법원의 증인지원관 및 증인지원건수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증인지원관 인원수	78	80	83
특별증인지원실 수	58	58	58
특별증인 지원건수	3,112	3,119	2,945
취약증인 지원건수	4,967	4,434	4,249

- 피해자 신원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년 「공탁법」을 개정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 가능
 - '1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 정보공개 방지 목적의 사건보도 지침 마련
 -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제정('18년)

–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으로 ‘아동학대사건 보도 권고기준’ 마련(’18년)

• 신변안전조치 확대 시행 및 관련 사업 고도화

– 경찰의 신변안전조치건수가 ’16년 13,758건에서 ’19년 35,007건으로 37% 증가

– 주거지 CCTV 신변사업 고도화(’17.), 스마트워치 디자인 개선 및 성능 향상(’18.),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 확대 사업 진행

※ 경찰의 신변보호 및 조치 현황

년도	조치 건수	ICT기술			인력		제도			시설	
		112 등록	스마트 워치	CCTV	맞춤형 순찰	신변 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개인 정보 변경	보호 시설	임시 숙소
2016	13,758	4,288	3,299	147	2,928	125	1,352	1,198	42	122	258
2017	19,319	6,375	4,532	259	4,525	82	1,620	1,681	30	33	182
2018	25,000	9,016	5,243	230	6,831	26	1,691	1,841	18	13	91
2019	35,007	13,350	7,057	287	9,948	20	1,830	2,400	15	13	87
2020	27,131	11,115	5303	283	7,938	11	983	1,432	2	5	59

–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위해 이전비 지급, 신원관리카드 작성, 위치확인장치 지급,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법정동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신변보호 강화

※ 검찰의 신변보호 조치 현황

년도	이전비	신원관리카드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제공	법정동행
2016	205	159	57	8	1,536
2017	195	95	44	8	1,353
2018	138	117	47	4	873
2019	149	109	32	3	757
2020	189	104	30	0	678

•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 제공 추진(’17.), ‘범죄수사규칙’ 개정하여 피해자 대상 사건진행상황 통지시기 구체화

2-5. 정책추진체계 정비 및 강화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 정책 추진 기반의 정비

■ 주요 추진성과

- '17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액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당 인건비 국고지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과의 형평성 일부 제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구조조정 및 범죄피해구조금 예산 증액
 - '17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구조조정 실시
 - ※ '18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안) 편성 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국고보조를 조정 완료(서울75%/지방85% → 서울50%/지방70%)
 - '19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구조조정 실시
 - ※ '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안) 편성 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6억 원을 복지부 내 일반회계로 이관
 - '20년 범죄피해구조금 예산 증액
 - ※ ('19년) 10,000백만 원 → ('20년) 10,708백만 원(708백만 원, 7.1% 증)
 - '20년 기금 재원의 원천인 벌금 수납액 전입 비율을 6%→8%로 상향 조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재원 확보

※ 범피기금 설치 이후 벌금 수납액 전입비율

구분	'11년~'12년	'13년~'14년	'15년~'20년	'21년
전입비율	4%	5%	6%	8%

- '2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구조조정 실시
 - ※ '22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안) 편성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287억 원을 복지부 내 일반회계로 이관

3 한계 및 향후 과제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과 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필요

- 경찰은 심리학 전공자 등의 경력채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조치,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전문 지원기관의 연계 등 응급위기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전문인력은 주간 근무체제로 활동하고 있어 야간 및 주말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응급위기 지원의 공백 발생
- 24시간 작동하는 응급위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의 지원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응급위기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변화 필요

- 제1차~3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발굴과 시행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 대표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인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경우 지원항목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범죄피해로부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다수의 범죄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그리고 심리지원,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과 같이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주거, 고용안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과 같은 중장기 피해회복 지원제도는 여전히 성과가 미미한 상태임
- 경제적 지원 금액의 실질화 및 지원 대상 확대, 의료복지나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 중장기 피해회복을 위한 예산확충과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식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가해자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식을 높이고, 이의 결과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도 촉진시키기 위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와 화해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들은 활용도가 낮거나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필요

- 제2차 및 제3차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알권리와 피해자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으나,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열람·복사권은 가해자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제한적이고, 공판과정에서 증거나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변호사의 권한 또한 제한적임
- 범죄피해자가 공판절차에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위로 참가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정보통신망 등에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 대책과 신원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사건보도지침 등의 마련으로 전통 언론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1인 미디어, 뉴스포털 댓글 등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가 심각함. 이러한 공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도 낮고, 수사기관의 법적용사례도 거의 없음. 한편, 언론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출된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법률상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언론이나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신원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신변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를 반영한 예산 및 인력 확보와 신변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변경호에 대한 욕구가 높음. 그러나 이에 대응할 만한 예산과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신변보호 조치는 112등록이나 스마트워치 제공 등과 같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계에 의존하는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신변보호 조치의 증가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추진에 있어 중앙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의 협력 필요

- 실효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합적 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범죄피해자 및 지원기관 등 민간의 참여를 통한 현장 밀착형 정책 수립과 평가결과 환류 등이 필요하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간 협력적 시스템 구축 미흡

■ 정책기반 강화 필요

- 범죄피해양상의 변화,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정책수요자 등의 욕구에 부응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 및 연구기반이 부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확정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심층적 평가와 그 결과의 환류시스템 미비

IV.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기본계획의 개요



IV.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개요

1 수립 방향

■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현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

- 제1, 2, 3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발굴·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추가적인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현행 정책이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춤

■ 수사권조정이라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 '21년 1월부터 수사권조정 결과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법무부·대검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었으므로,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절차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피해자의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력 관계 수립을 정책 영역 과제 개발 시 고려

■ 가해자의 피해배상 책임 실현과 국가의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통해 피해회복에 초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는 가해자의 피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충적인 제도로서, 가해자의 피해배상 자체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가해자의 피해배상이 원칙이므로 형사절차 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춤
- 기존에 죄명, 과실범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의해서 제한이 있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확대를 검토하되,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사법통제의 조화를 도모함

■ 정보통신망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2차 피해 규모 및 속성 변화를 감안한 지원정책 마련에 초점

- 불법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와 더불어 1인 미디어나 포털 댓글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유출·공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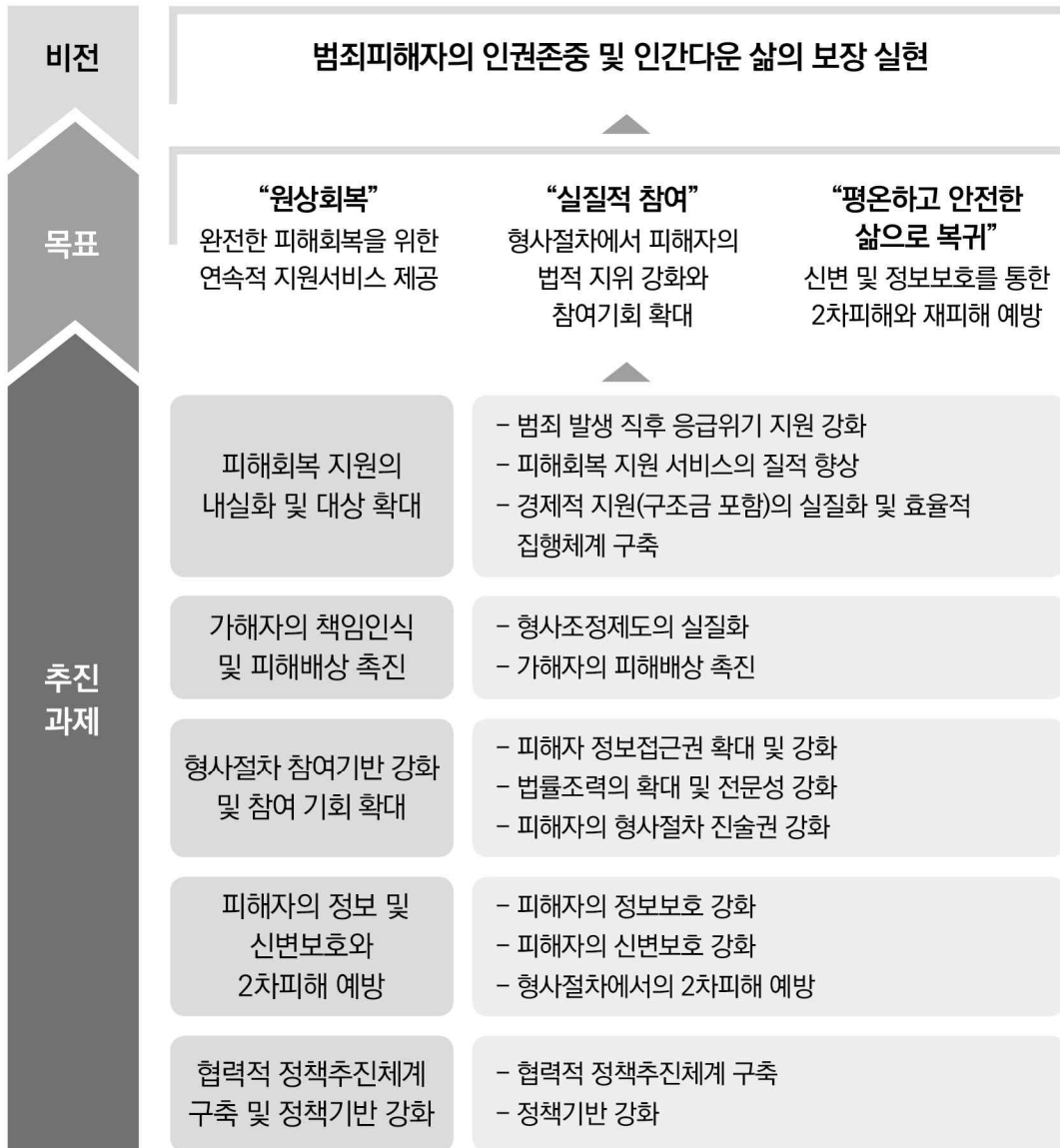
■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정책기능 강화에 초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중복성, 비효율성, 지원의 지연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추진주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정책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초점

■ 정책기반 강화에 초점

- 각 정책영역에서 체계적인 정책시행에 장애요소가 되는 관련 법률의 정비, 정책개발 및 수립에 기초가 되는 관련 행정통계와 평가연구의 축적, 시행계획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점검, 분석, 환류체계 구축,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 및 범죄피해 보호지원 민간전문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춤

2 비전과 목표



3 제4차 기본계획의 구조

■ 향후 5년간 총 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 “실질적 참여”,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5대 정책 영역의 13개 정책과제, 87개 세부추진과제 추진

구분	제3차('17~'21) 기본계획	제4차('22~'26) 기본계획
정책 영역	<p>Ⅰ 5대 정책영역 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회복 지원 • 피해 배상과 국가의 보상 강화 •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안전 • 정책추진체계 정비 및 강화 	<p>Ⅰ 5대 정책영역 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과제 구성	<p>Ⅰ 13개 정책과제 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초기 개입 및 지원 강화 • 중장기적 피해회복 지원 강화 • 통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체계 구축 • 형사절차상 피해배상제도 활성화 • 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 전문가 조력제도의 확대 및 내실화 •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방지 •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 보호 강화 • 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정책 추진 기반의 정비 <p>68개 세부추진과제</p>	<p>Ⅰ 13개 정책과제 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 체계 구축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 예방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p>87개 세부추진과제</p>
추진 기관	<p>Ⅰ 9개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p>Ⅰ 9개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V.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V.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1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1-1.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1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 2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1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 2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 3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1-3.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 1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 2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대상 확대
- 3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경제적지원(구조금)의 집행 체계 개선

1-1.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현황 및 진단

범죄 발생 직후 응급 위기지원 미흡

-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조치 등 응급위기 지원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찰은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시도경찰청에 위기개입 상담관을 충원하였음.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이러한 전문 인력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응급위기 지원을 하는 경우는 대형·중대 강력범죄 사건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강력범죄 사건 현장에는 일반 경찰만 출동하여 현장 수습과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범죄 발생 직후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조치 및 여타 지원, 지원기관 연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위기개입 상담관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112 긴급 신고 전화 이외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응급위기 지원체계가 작동되지 않음. 이에 따라 심리적 응급조치나 필요한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112 상황실 근무자 혹은 현장에 출동한 일반 경찰에게 맡겨져 있어 신속한 개입과 적절한 연계에 한계가 있음

※ '20년 피해자전담경찰관은 157명, 위기개입상담관은 43명 배치

※ '19년 야간(21시~06시)에 발생한 강력범죄(폭력범죄 포함)건수는 277,856건으로 전체 강력 범죄 발생건수 854,298건의 약 32.5%에 해당

- 강력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응급조치 이외에 응급물품·식사·의류·교통수단·임시숙소·현장청소 등의 제공이나 응급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장례비 등과 같은 긴급 경비지원이 필요함. 이 중 일부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시숙소비 지원과 같이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응급위기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지원욕구를 반영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아직 지원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예: 응급물품지급 등). 범죄발생 직후 긴급성과 현장성을 요하는 응급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세부 과제

1-1-①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1-1-②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1-1-①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신속·정확하게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발생 시 경찰·검찰이 협력하는 핫라인 구축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확대·실질화하여 범죄발생시 부터 적기에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물류센터 화재·지진 피해 등 대규모 재난 위기 상황 시 검·경 응급위기 전담팀 구성을 통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다양한 응급위기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피해발생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숙소비 지원 등 기존 응급위기 지원 서비스 확대 검토
 - 응급상황 발생 시 검찰의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활용방안 제고 및 홍보 강화

*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1-1-②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 사건현장 출동 경찰 대상 체계적 응급위기 지원 교육 시행 (경찰청)
 - 사건현장 출동 경찰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에 있어 응급위기 지원의 중요성, 심리적 응급조치의 방법,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시행
- 응급위기 지원 경비의 신속한 집행체계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응급위기 지원 경비(야간 응급실치료비, 장례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신속하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응급위기 지원 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비상 연락 체계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신속·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15. 구축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피해자 전문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마련 검토

※ 법무부는 2년 단위로 각 정부부처의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지역별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담은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경찰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 추진
- ※ 피해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재중 또는 업무시간 외 수신전화 자동응답 및 문자 제공 서비스』 도입 추진

현황 및 진단

피해회복 지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도모의 필요성

- 제1차~3차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초기의 심리지원에서 자활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의 전 단계에서 기본적인 피해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일정정도의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의 기반 위에서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자원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 해소와 심리지원의 제공 방안의 다양화 모색 필요

- 범죄피해 이후 범죄피해자 및 가족이 겪는 심리적 후유증은 평온한 일상생활 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제2차 기본계획 시행이후부터 심리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접근성 등의 문제로 전문 심리치료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중요한 심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리상담·치료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심리지원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민간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지정 등과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가 생업, 심리상담 및 치료 기관으로의 이동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심리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서비스 제공 방안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립·자활 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직장생활 중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피해로 고용불안정에 내몰린 피해자, 범죄피해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직종을 찾아야 하는 피해자,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기 힘든 피해자, 가해자를 피해서 주거를 이전해야만 하는 피해자 등 고용안정 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지원, 주거지원 등과 같은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피해자가 있음

현황 및 진단

- 제1차~3차 기본계획에서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계속해서 개발되었으나 거의 성과가 없었고,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분양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자립 및 자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폭력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인 자립 가능성이 재피해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폭력 피해자도 피해이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주지역을 떠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서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큼. 이들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원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내일배움카드 등)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하고 있는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고, 지원 대상 또한 보호시설 입소자와 임대주택 입주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상별 맞춤형 피해회복 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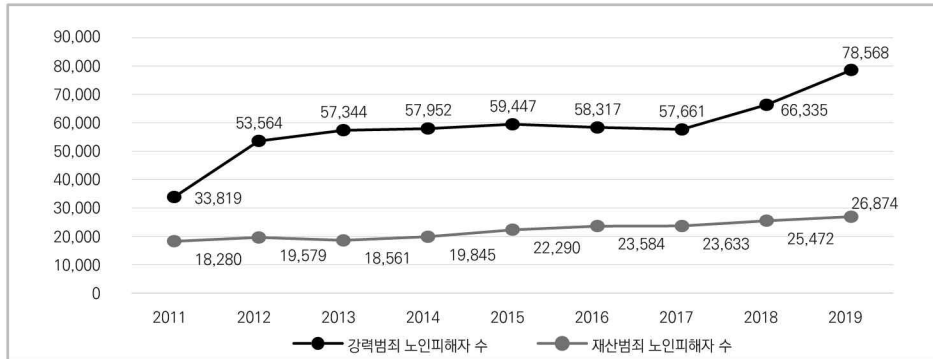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가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에서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되었으나,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 특성별로 특화된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차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 노인 범죄피해자, 재난 및 테러 등 다중피해 등에 특별한 고려와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살인범죄 발생 직후 피해 유가족은 공황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후 PTSD의 발병률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더 높은데다가 일반적인 PTSD의 증상과 다른 특유한 반응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뿐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현황 및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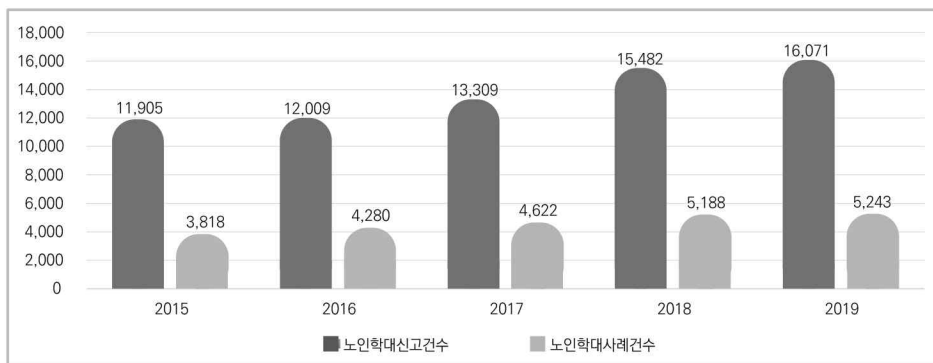
• 2000년,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2020년에는 1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0%, 2067년에는 46.5%를 차지해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범죄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함. 특히, 노인이 사기 등과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정부의 피해회복 지원은 강력범죄 피해에 한정되어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 고령화 사회는 65세 노인인구의 비율 7%이상~14% 미만, 고령사회는 노인인구의 비율 14%이상~20%미만, 초고령 사회는 노인인구의 비율 20%이상을 의미함

※ 노인 강력범죄 및 재산범죄 피해자수 추이



※ 노인학대 피해자수 추이



※ 노인학대통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으로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로 분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음

세부 과제

- 1-2-①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서비스 전문화
- 1-2-②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 1-2-③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1-2-①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 의료복지 소외 지역의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확보 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민간의 전문적인 심리치료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일센터의 방문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제도 도입, 심리치료지원 부대비용 예산(출장비) 확대, 심리치료비 지원 내용 다양화, 범죄피해자에게 방문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방문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활성화
 -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활성화,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을 설치하여 지역 내 고난도 사례 심리치료 및 협력체계 운영
-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 온라인 심리상담 및 치료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및 검토
 -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CBT(인지행동치료), EMDR(안구운동민감소실 재처리요법) 등의 전문치료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매뉴얼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강구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범죄피해 유형, 치료 효과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2-②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 자립·자활 지원 방안 마련 (법무부, 고용노동부)
 - 외국의 범죄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이전 기본계획에서 자립·자활 지원 정책과제로 개발되었던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근로자의 형사절차 참여 또는 치료과정을 위한 휴가 보장, 공공기관의 범죄피해자 우선고용제도,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 설립 확대 등의 재추진 검토

- 피해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대상 확대 (법무부, 여성가족부)
 -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위한 경비 지원제도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비의 예산을 확충하고, 현재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상담서비스를 받는 피해자에게도 확대

1-2-③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강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수사기관 대상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 지원 지침 마련
 - 스마일센터 내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 지원 전문팀 운영 검토
 - 범죄피해지원센터 중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 지원에 특화된 센터 육성과 지원 매뉴얼 개발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별 지원체계 마련
-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근거 마련 및 진술분석관 확대에 아동학대범죄 심리·조사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3년 10월부터 사례관리만 전담하고,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을 통해 사례관리 내실화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를 적정 규모까지 확충하여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 강화
 -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대피해 영유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등 성폭력 피해지원 기반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및 대검 D-NET을 이용하여 불법 동영상 유포 차단·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와 검·경 핫라인을 구축, 증거수집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공판 시 적극 활용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을 통해 지원 서비스 질 향상
-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법무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학대 피해노인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 강화
 -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강화, 법률지원 등 지원 서비스 내실화 등을 통해 재학대 예방 강화
 - 노인학대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현황 및 진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구조조정에 기반한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대상 확대 필요성

-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구조금'과 까다로운 구조금 지급요건, 피해의 일부분만 반영하는 구조금 산정기준, 제한된 구조금 지급대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지원(협의)'으로 나누어져 있음. 현재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제도의 지원 금액과 대상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임으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활용이라는 개선을 전제로 해서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합리적 산정기준에 기반한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포함)의 현실화 필요성

- 현재 범죄피해구조금은 평균임금에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개월수' 상한은 기본일 경우 40개월로 정해져 있어 최대금액이 1억 3천만원으로 원상회복이라는 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함. 특히,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의 '개월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연령(취업가능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고령피해자와 취업가능기간이 긴 젊은 피해자의 구조금이 동일하다는 문제도 있음. 그리고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개월수'가 치료기간이지만, 마찬가지로 그 상한이 4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치료기간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월수의 상한 조정 혹은 구조금 유형별로 개월수 산정 시 고려해야하는 합리적 기준의 설정을 통해 구조금액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구조금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원 항목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상향되었으나, 경제적 지원제도 역시 피해자가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경제적 지원 유형별로 금액과 지원 기간의 현실화를 위한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 치료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인당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가 있어 화상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미흡한 실정임
 - － 생계비는 월 50만원 상한으로, 2020년 COVID-19 가족돌봄비용으로 1일 5만원 책정된 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임

현황 및 진단

- 장례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400만원이 상한으로 2015년 우리나라 기준 평균 장례비 1,380만원, 2021년 최저임금기준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례비 약 697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지원필요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대상 확대 필요성

-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구조금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대상은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한정되어 있거나,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의 경우에도 신체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국적,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피해 발생 등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다수의 범죄피해자들이 구조금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범죄의 피해자는 제외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간이면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특별한 경우에 포함됨. 그리고 중상해구조금은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만 지급대상으로 함. 그러나 신체피해의 정도, 과실범죄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여부를 떠나 범죄피해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조금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과실치상·사죄는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죄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최근 주거침입이나 디지털 성범죄가 경제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과 같이 재피해의 우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나 관련 범죄행위가 대물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재산피해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역시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화, 지구화와 함께 국민의 여행, 유학, 취업,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체류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국민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해외 체류 내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국가의 상호지급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황 및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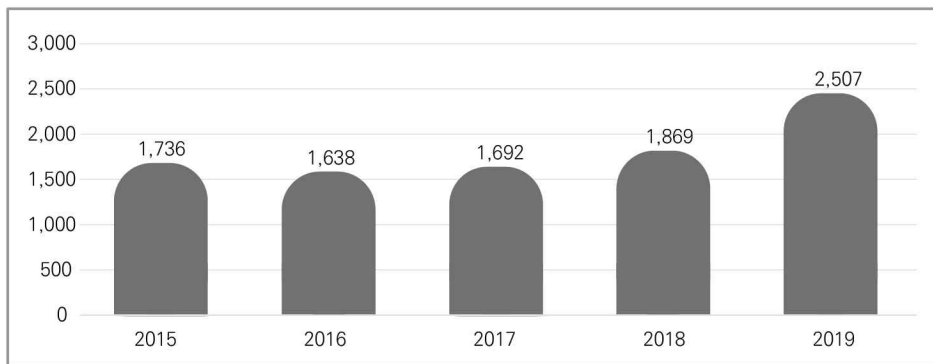
- 경제적 지원은 최근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국민의 해외체류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	영주권자	체류자	
			일반	유학생
2016	2,663,714	1,049,210	1,354,220	260,284
2018	2,687,114	1,031,782	1,362,175	293,157

※ 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피해 추이



- 지원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은 재정상황에 의해서 정책대상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범죄피해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금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현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지원 필요가 있는 범죄피해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집행체계 개선 필요

-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협의)로 이원화됨에 따라 신청과 심의의결기구도 검찰청 지검단위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와 지검 및 지청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현황 및 진단

- 또한, 경제적 지원(협의)은 지원항목에 따라 검찰청의(지검+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심의 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음.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을 위한 심의의결 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지원의 유형	심의기구
범죄피해구조금	검찰 지검단위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생계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검찰 지검 및 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간병비, 취업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20년에 범죄피해자지원을 받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신속성, 전문성, 편리성, 정보성, 친절성,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게 한 결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세부 과제

- 1-3-①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 1-3-②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대상 확대
- 1-3-③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경제적지원(구조금)의 집행 체계 개선

1-3-①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 범죄피해구조금액의 순차적 상향 (법무부)
 - 범죄피해구조금 유형(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별로 산정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
 - 범죄피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조정 및 순차적 상향 계획 수립 검토

- 구조금 이외 경제적 지원 금액의 순차적 상향 (법무부, 대검찰청)
 - 경제적 지원 유형별로 지원금 산정기준의 적절성 검토 및 지원 금액 실질화를 위한 현실적 산출기준 마련
 - 경제적 지원 유형별로 산정기준 조정이후 순차적 상향 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

1-3-②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대상 확대

-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의 단계적 확대 (법무부)
 - 5주 이상의 중상해 피해자(현재 경제적 지원 대상임), 과실치사상 피해자,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구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여부 검토
 - ※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대상을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1. 6. 25. 입법예고한 바 있음
- 구조금 이외 경제적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법무부, 대검찰청)
 -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제도 간 역할 분담과 관계설정을 통해 경제적 지원 대상 피해유형과 피해자유형에 대한 재검토
 - 5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피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경제취약계층의 재산범죄피해 등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 방안 검토
 - 우선순위 선정 후 순차적 확대 계획 수립, 단계적 시행

1-3-③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경제적지원(구조금)의 집행체계 개선

-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속도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 지원 속도 개선
-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 현행 경제적 지원을 구조금으로 상향입법하여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심의기구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심의기구의 상설 기구화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2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2-1.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1 형사조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2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 및 접근성 강화

2-2.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1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2-1.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현황 및 진단

검찰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사조정 의뢰율의 담보 상태

- 2006년 시범실시 후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행되는 제도로 가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인식을 높이고, 이의 결과로 피해에 대한 배상도 촉진시키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
- 형사조정은 시행 이후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담보상태에 있음. 또한,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11만 건 정도로 한 해 동안 형법기관이 인지한 전체 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년 5.6%이고, 지난 8년간('13~'20) 평균은 4.35%로 매우 낮음

※ 형사조정 현황

(단위 : 건, %)

구분 연도	전체 사건수	의뢰건수	의뢰율(%)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률(%)
2013	1,852,437	33,064	1.8	28,441	14,772	51.9
2014	1,813,508	54,691	3.0	45,527	25,523	56.1
2015	1,950,674	87,272	4.5	73,298	42,527	58.0
2016	2,064,407	111,012	5.5	95,236	57,102	60.0
2017	1,870,448	118,113	5.5	101,801	59,424	58.4
2018	1,750,330	117,014	5.5	99,176	57,061	57.5
2019	1,787,734	118,311	5.6	100,520	56,946	56.7
2020	1,694,482	77,514	3.5	66,425	34,296	51.6

자료출처 : 이동임(2020),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p. 366(재구성); 대검찰청 내부자료(2020).

- 2011년 형사조정에 참여한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김지선(2011), 형사조정제도의 성립률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일단 형사조정에 참여한 양 당사자들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진단

- 한편, 최근에 각 검찰청별 형사조정위원회건수 및 합의율, 공중시행건수 이외에는 형사조정과 관련된 실증적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형사조정 전반에 운영과정과 참여자들의 형사조정의 태도 및 인식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형사조정사건을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고소사건 중 재산범죄와 명예훼손, 모욕 등 사적 분쟁을 주된 형사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형사조정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폭력사건의 경우 조정성립률이 더 높았고,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합의내용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형사조정이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을 때에도 가해자의 책임인식을 통해 피해자의 배상을 촉진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2011년과 2015년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에 의뢰된 사건 총 2,180건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기사건의 형사조정성립률은 49.0%인데 반해, 폭행과 상해사건은 각각 76.5%와 73.8%로 훨씬 더 높았고, 합의된 사건 중 합의금이 없는 사건의 비율도 사기(6.4%)에 비해 폭행과 상해가 각각 44.7%와 29.2%로 훨씬 더 높았음. 그리고 형사조정성립이후 합의내용이 실행된 비율이 사기는 50.0%인데 비해, 폭행과 상해는 96.3%와 91.0%로 거의 2배 정도 높았음(이동원·윤현석, 2018, 범죄유형에 따른 형사조정 특성에 관한 경험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9(3))

- 일부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당사자들의 참여의 편의성을 높여 형사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화조정, 출장조정, 야간 및 주말조정, 분리조정 등을 시행하였고, COVID 19에 따라 화상조정도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조정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 최근 형사조정의 대상사건이 다양화되면서 성폭력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회부되고 있으나, 성폭력사건 특히, 디지털성범죄사건에서 조정위원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세부 과제

2-1-① 형사조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2-1-②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 및 접근성 강화

2-1-① 형사조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대검찰청)
 - 형사조정 운영과정과 참여자들의 형사조정의 태도 및 인식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 형사조정 진행 방식의 다양화 (대검찰청)
 - 검찰청 내에서 직원의 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형사조정 참여자들의 편의성 및 성립률을 제고할 수 있는 형사조정 진행 방식 다양화 방안 마련
-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대검찰청)
 - 형사조정위원의 위촉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분야(혹은 직역)의 형사조정위원을 확보하여 전문분야를 고려한 사건 배당 등 운용 제도 개선
 - 정기적인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개선

2-1-②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경찰단계 사건을 검찰청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식 등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검토 (대검찰청, 경찰청)
 - 현재 각 지방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형사조정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정기능 강화 및 경찰도 조정을 의뢰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형사조정대상 범죄 확대 및 관련 규정 개정 (대검찰청)
 - 현재 고소사건 및 재산범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

2-2.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현황 및 진단

배상명령제도의 저조한 활용도와 활성화 필요성

- 최근 들어 배상명령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1심 공판사건 중 배상명령 신청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1심 공판사건 중 배상명령 신청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로 여전히 신청률이 저조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청구는 2007년 이후 한건도 없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음

※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 (2016년~2019년)

(단위 : 건, 천원)

연도	배상명령						배상명령 접수율 ¹	배상명령 접수율 ²	인용률	취하/ 기타 비율
	접수	처리	인용	기각	기타	취하/ 기타				
2011	5,803	5,127	1,598	3,013	33	483	2.09	5.05	31.17	9.42
2012	6,438	6,256	2,254	3,033	259	710	2.20	5.45	36.03	11.36
2013	6,688	6,196	1,973	3,573	27	623	2.47	5.29	31.84	10.05
2014	5,901	6,012	1,843	3,684	90	395	2.20	4.58	30.66	6.57
2015	6,799	6,176	1,820	3,962	25	369	2.62	5.31	27.47	5.97
2016	9,245	8,887	2,278	6,211	42	356	3.35	7.05	25.63	4.01
2017	8,181	8,125	2,758	4,974	45	348	3.12	6.61	33.94	4.28
2018	9,826	8,914	3,699	4,820	46	349	4.09	8.29	41.50	3.92
2019	14,837	13,598	6,254	6,957	97	290	6.02	12.31	45.99	2.13

자료출처: 차성안(2021), 「배상명령 활성화 입법에 대한 평가와 그 시사점」, p. 316(재구성).

* 배상명령접수율¹: 전체 1심 형사공판접수건수 중 배상명령접수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배상명령접수율²: 배상명령청구가 가능한 전체 1심 형사공판접수사건 중 배상명령접수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 한편, 30%대에 머물던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최근 2년 연속 40%대로 높아졌으나, 인용된 사건의 90% 이상이 피해액 산정이 쉬운 소액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편중되어 있음

현황 및 진단

※ '19년 범죄유형 별 배상명령 인용건수 및 평균 배상명령액

(단위 : 건, 원)

범죄유형	계	100만원 까지	500만원 까지	1,000만원 까지	5,000만원 까지	5,000만원 초과	평균 배상명령액
전체	6,254	5,182	408	124	319	221	10,076,434
폭력	61	50	8	1	1	1	1,887,508
성폭력	19	7	6	3	2	1	10,055,251
절도/강도	145	112	24	3	4	2	2,200,518
사기	5,853	4,927	339	108	275	204	8,209,520
횡령/배임	63	28	6	4	17	8	207,945,270
기타	113	58	25	5	20	5	10,990,090

- 소액 사기범죄(특히, 인터넷 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인 반면 피해액은 적은 경우가 많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범죄피해자의 집단소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법제도상의 한계를 고려해볼 때, 배상명령제도가 소액 사기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기존의 금전에 기초한 합의가 가해자의 양형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잘못된 손해배상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액 사기범죄 이외 다른 범죄에 배상명령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실증적 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활용도

- 2006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이하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음.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는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합의 사실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며, 합의 사실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로, 배상명령제도와 함께 피해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음

현황 및 진단

- 그러나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가 전무하며, 관련 연구도 전혀 없는 상황임. 형사재판상 화해제도가 배상명령제도와 함께 형사절차 내에서 가해자의 배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세부 과제

- 2-2-①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2-② 형사재판상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2-2-①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범죄피해자의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및 방식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범죄피해자 조사 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고지하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와 기소 후 검찰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때 사용되는 서식에 포함된 배상명령 안내 내용을 수정하여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검찰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시 배상명령 안내서와 신청양식을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성폭력범죄의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법무부, 법원행정처)
 - 보복 우려 등으로 가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도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배상명령 신청서 부분 송달과 각하결정에 적용되는 피해자 신원보호방안 등을 고려하여 배상명령 집행절차에서의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방지 방안 검토
-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사건에 대한 현황 확인 및 개선방안 강구 (법무부, 법원행정처)
 -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사건에 대한 분석 및 배상명령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배상명령 대상, 인용·기각 사례, 배상명령절차 내 법률조력 여부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일본, 대만 등의 유사제도의 입법례 등 확인하여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마련

2-2-②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홍보 및 안내 강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서와 안내서를 개선하여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를 피해자에게 쉽게 안내하는 방안 검토
 - 사건처분 시부터 공판절차 내 피해자에게 해당 제도를 실효적으로 통지하는 방안 검토
-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운영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법무부, 법원행정처)
 - 공판절차에서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용 정도, 활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3 형사절차 참여 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3-1.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1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 2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3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3-2.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1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2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 환경 조성
- 3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3-3.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 1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 2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3-1.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현황 및 진단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

- '1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된 이후 범죄유형별(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로 특화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서' 제공, 법률용어 순화 및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안내서 내용 개선, 리플렛 E-Book 안내서(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홍보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안내와 같은 개선이 있었음. 그러나 권리 고지 시 일방적 전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문의 및 상담을 통한 고지 및 안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권리고지 안내서 제도가 시작된 이전과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지의무화 이후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연성진·서주연, 2015,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법무부)

※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안내문의 이해 정도를 연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고지서에 포함된 '공판조서', '확정판결', '민사소송' 등의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박송희·김민지(2019),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의 이해도 평가, 한국경찰연구, 18(3))

사건진행상황 관련 정보 통지의 적시성 결여

- 범죄피해자의 신청 및 동의에 기초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통지받을 수 있는 정보범위가 확대되었고, 검경 수사권조정을 반영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찰 송치 후 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고소사건에서 인지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경찰에서 수사관련 상황에 대한 통지가 월 1회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떤 특정 사안에 관하여 언제까지 통지하라는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한 통지내용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관련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보를 적기에 받기 어렵고, 통지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문제도 있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할 것인가를 표준화하여 적시성과 실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진단

- 현재 검찰은 정보제공에 동의한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관련 사항 이외에도 공판진행, 형 집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고 있으나, 타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송달받은 후 혹은 자체점검을 통해 인지한 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공판진행 사항, 형 집행 상황, 보호관찰 집행 상황은 해당 기관이 통지의 주체가 되어 직접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KICS 상 자동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필수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를 입력하도록 하고, 검·경간 피해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 통지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가명조서 작성 후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 가명조서제도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 대상범죄이외에도 가명조서를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확대된 이후로 그 활용이 활성화되어 피해자의 신원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명조서 사건을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할 때 가명을 사용한 피해자의 정보(실명 혹은 가명)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 경찰과 검찰 간 통일된 지침이 없고, 각 기관 내에서도 관서마다 입력 방식이 달라 피해자 및 피해자국선변호사가 검찰콜센터나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사건조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보호를 위해 활용한 가명조서 작성이 이후 형사사법절차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명조서 작성 후 피해자 신원정보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가명조서 사건 관련 지침에는 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사법포털에서의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관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 열람·복사권의 상대적 취약성

- 피고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열람·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 공판조서 열람·등사나(제55조)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을 청구(제56조의2)한 때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의 서류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신청을 검사가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제266조의4)를 두고 있음

현황 및 진단

- 이와는 달리,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공판기록을 열람·복사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판사가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열람·복사 불허 처분에 대해 불복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열람·복사권 보장이 불균형적인 상황임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필요성

- 소년형사사건과는 달리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에게는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소년심판의 개시 여부, 심리기일 및 장소, 심리결과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소년심판 결정서의 등본과 초본의 교부 및 소년 보호사건 기록의 열람권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가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세부 과제

- 3-1-①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 3-1-②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3-1-③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3-1-①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 피해자 권리 고지 및 보호·지원제도 운영의 실질화(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QR코드로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자료와 연결되게 하는 등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피해자 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 및 지원 고지서’ 양식 및 내용 개선
 - 사건처분 시 처분통지 외에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자가 자동 발송될 수 있도록 KICS 시스템 개선 예정
 -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피해자·피해자 변호인 관련 정보 및 지원한 내역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보호·지원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호 자료 공유

- 형사절차 관련 정보 통지의 적시성 확보 및 내용 표준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범죄피해자의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욕구 및 신변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상 제공해야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 구체화 및 형사공탁 관련 정보 추가
 - ※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한 조사종료 여부,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과 불구속 여부,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보호처분 등의 결정·연장·취소·변경 등에 관한 정보 통지가 필요
 - 형사절차 관련 정보통지 주체를 사법경찰관·법관·교도관·보호관찰관 등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지 누락 방지 및 적시성 확보
 - 필수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정보 및 관련된 결정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조치를 실행한 기관이 KICS에 입력하여 신속히 피해자에게 자동통지하도록 시스템 개선
-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서비스 기능 및 대상 확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피해자,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건초기부터 피해자·피해자 변호사 정보를 입력하고, 검·경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
 - 현재 피고인 및 그 대리인에게만 제공되는 법원단계 사건조회 서비스를 범죄피해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사법포털 상 사건조회 서비스 대상을 현재의 5대 강력범죄 피해자에서 모든 범죄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가명조서 작성 후 관리체계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가명조서 작성 시 피해자 및 피해자변호사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현재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KICS상 피해자신원정보 입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형사사법단계별로 가명조서 관리 점검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3-1-②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열람·복사권 확대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경찰청)
 - 수사·공판절차 내 피해자의 열람·복사권을 규정한 관련 지침 및 현황을 점검하여 피해자의 열람·복사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상향입법 검토
-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경찰청)
 -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정보제공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소송계속 중 피해자의 열람·복사 신청권 등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 중 정보접근권 실현 및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검토

3-1-③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 소년보호사건 심리 관련 정보에 대한 피해자 통지 추진 (법원행정처)
 - －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소년보호사건 진행, 결정 등 심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제한적 허용 (법원행정처)
 -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비행의 성질, 심리상황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현황 및 진단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의 지역적 평준화와 질 제고

- 지난 5년간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증원되었고, 각 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가 620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별 명부상 등록 변호사 편차가 크고,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검찰청도 존재하고 있어, 피해자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함. 등록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등록된 피해자국선변호사수는 '18년 670명 → '20년 621명으로 감소
등록된 피해자국선변호사수가 3명 이내인 검찰청은 '18년 14개 → '20년 17개로 증가

-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20.)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액 변동이 거의 없음. 피해자국선변호사의 활동 각 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집행액이 지원건수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법률조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됨

※ '18년 지원건수 22,755명, 집행액 5,841백만원 → '19년 지원건수 25,459명, 집행액 5,507백만원

-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민원제기 여부 등에 기초한 명부관리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실질적인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적극적 활동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보수산정 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 '18년 6월 피해자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상 보수기준을 개정한 이후 집행액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보수지급방식이 적절한지 점검 필요

현황 및 진단

안정적인 법률조력을 위한 피해자변호사의 권한 강화 필요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변호사(사선 및 국선변호사)에게 관련 기일 통지, 공판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등이 부여되어 있으며 공소장 등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규정 마련 등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권한이 확대되었음
- 그러나 피해자변호사에 대한 사건정보 및 형사절차단계별로 달라지는 사건변호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법률조력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증거나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중인 신문 시 2차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피해자 법률조력을 원활히 진행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확대와 연동한 피해자국선변호사 권한 강화가 요청됨

피해자국선변호사 법률조력의 범위 확대 필요

- 제3차 기본계획 이행과정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대상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및 장애인학대 피해자로 확대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화되는 등 확대되어 왔음
- 그러나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범위가 성폭력 및 아동·장애인 학대범죄의 ‘형사절차’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법률조력에 한계가 있음. 피해자국선변호사 필요적 지원대상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력이 민·형사 등을 불문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민사절차에 대한 법률조력 지원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보호자가 아닌 가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사건에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 경우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범위에 ‘가정폭력처벌법’ 상 법률 조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이 발생함
- 살인·살인미수·중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제한되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형사절차 참여를 조력하기 위해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진단

진술조력인제도의 내실화 필요

- 매년 진술조력인 신규양성을 통해 '20년 현재 전국 136명의 진술조력인(상근 16명, 비상근 120명)이 양성되어 있으나,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건수가 '18년 약 705건에서 '20년 약 1,390건(전체 진술조력인 연간 참여 건수의 약 5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활동 수당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미흡해 매년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안정적인 진술조력 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활동수당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비상근 진술조력인 간 활동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명부에 등록된 비상근 진술조력인 중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술조력인의 활동의무시간을 설정하고, 활동의무 시간 준수여부를 진술조력인 자격 및 선정 취소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비상근 진술조력인 중에서 실제로 활동이 가능한 진술조력인을 우선적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아동·장애인 사건 관련 전문성이 있는 비상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기에는 명부에 포함된 정보가 제한적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명부에 진술조력인의 구체적인 전문분야 및 활동가능 지역, 활동가능 요일과 시간대 등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명부 관리와 운영 필요
-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술조력이 가능하도록 '14년 상근 진술조력인을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년 16명의 상근 진술조력인이 배치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시 경력, 근무연차, 업무강도를 고려한 적절한 보수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적인 상근 진술조력인 제도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안정적인 진술과 진술조력을 위한 환경 구축

- '20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이외에도 13세 미만의 참고인이나 증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해바라기센터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현황 및 진단

-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술을 위해서는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조사환경 마련 및 조사자 인식, 진술조력인과의 협력적인 조사 진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소별 조사환경의 편차가 있음. 검찰에서 장애인 전용 조사실 구축을 위해 예산을 신청('22.)하는 등 수사기관 내 아동 및 장애인 조사에 적합한 환경 구축을 위한 물적 자원 구비에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담당자에 대한 아동 및 장애인 진술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적 자원 개선 방안 마련도 필요

세부 과제

- 3-2-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3-2-②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 3-2-③ 전문가 조력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3-2-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 －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의 발생건수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보 추진
 - －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활동을 양적·질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개선
-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법무부)
 - － 지역별 피해자 국선변호 대상범죄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
 - － 아동학대, 장애인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전문성 있는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 피해자변호사 공판절차상 권한 강화 (법원행정처, 법무부)
 - －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변호사에게 증인신문과정에 대한 의견 진술 권한 및 증인신문 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 피해자변호사 공판절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판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및 각급 법원 배포
 - － 피해자변호사에게 형사사법포털상 사건조회 및 형사절차 단계별 통지 방안 마련

3-2-②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 진술조력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법무부)
 - 사건 특성에 적절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명부에 진술조력인 전문분야, 활동가능 지역 등에 관한 정보 추가, 정기적 관련 정보 갱신 등 실효성 있는 명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형사사법기관과 공유
 - 진술조력인 자격 관리 및 선정 취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피해자 진술조력인 평가 및 실효적인 진술조력인 관리 체계 마련
 - 법률개정에 따른 진술조력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진술조력인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기관 다양화 및 처우개선 (법무부)
 - 지역 특성 등 고려하여 해바라기센터와 형사사법기관 등에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한 진술조력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 및 진술조력을 위한 수사 환경 구축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수사기관 내 아동 및 장애인에 적합한 조사환경 마련(영상녹화, 속기록 작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아동 및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진술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수사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3-2-③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정부부처, 민간단체,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 전문가 조력제도(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 검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법무부)
 - 피해자 지원 및 전문가 조력을 실질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조력대상 및 범위 확대, 충분한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평가방법 등 관리체계 구축 등)을 마련

현황 및 진단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강화 필요성

- 전통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증인과 같은 소극적인 지위에만 머물러, 형사절차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가 없었음.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1987년 “헌법” 개정 시에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도입하고, 같은 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규정함. 그리고 2007년에는 다시 한 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술자 확대, 배제사유의 완화, 진술내용의 구체화 등과 같은 성과가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여전히 증거조사의 한 방법인 증인신문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피해를 입고 나서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진행되는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신청을 기피하게 되면서 증인신문방식에 의한 피해자 의견진술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 참여 건수

(단위 : 건, %)

연도	기소 후 (공판 절차)	1심 형사공판 접수건수	공판절차 의견진술 참여비율
2016년	762	276,074	0.3
2017년	778	262,612	0.3
2018년	921	240,244	0.4
2019년	1583	247,063	0.6

자료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는 방식의 의견진술을 도입하여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참여권이 확대되었고, 성폭력사건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 이외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변론종결 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견진술(피해자 진정서 등 추가 제출)을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을 하고, 증인 또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위로 참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현황 및 진단

공판절차 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필요성

- 미흡하나마 공판절차상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그 이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보석의 심문 절차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규정은 없음. 그러나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범죄자의 구금여부는 형의 양정만큼이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일정한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나 보석 심문 절차 등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변호사제도가 도입된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에서만, 피해자변호사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변호사를 통한 간접적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 기소전 절차(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범죄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에 참여한 건수는 '16년 167건 → '17년 117건 → '18년 74건 → '19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김진희, 2020,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한국피해자학회 춘계세미나 발표문)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범죄피해영향평가 자료의 활용 방안 모색

- 경찰은 2016년부터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검찰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두 제도는 전문가의 참여정도, 피해영향을 평가하는 방식, 피해자의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피해를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2차 피해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피해자의 보호·지원업무에 활용하고, 이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함

※ 경찰의 범죄피해 평가제도 운영실태
(‘16년) 844건 → (‘17년) 1,007건 → (‘18년) 807건

자료출처 : 이정원, 2018,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전국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3).

- 현재 범죄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온전하게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참여해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결과 및 그 영향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피해자의 의견진술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가해자와의 대면접촉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자료의 제출이 피해자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

현황 및 진단

- 향후 경찰과 검찰의 범죄피해 영향평가 자료를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공판절차에서 양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검찰단계에서 기소결정 되기 전 작성된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 결정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세부 과제

- 3-3-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 3-3-②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마련

3-3-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법무부, 대검찰청)
 - 현행 증인신문형식에 의한 피해자 의견진술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의 운용 현황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위로 참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공판절차 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나 보석 심문 절차 등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방안 마련

3-3-②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 범죄피해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경찰의 “범죄피해 평가제도”와 검찰의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무상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가 형사절차 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범죄피해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대상범죄, 피해영향평가 시 전문가 개입의 필요성, 피해자의 양형 의견진술 포함의 필요성, 피해영향을 평가하기 적절한 시기, 진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개선안 마련
- 형사절차 전반에서 범죄피해자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및 제도화 방안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기소 절차, 보석 심문 절차, 보호관찰과 가석방 단계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성, 공판절차에서 서면의견진술 자료와 양형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 등 검토 및 제도화 방안 검토

4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1 형사절차 이외 분야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정책의 확대
- 2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 3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4-2.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1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 2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4-3. 형사절차에서 2차피해 예방

- 1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 2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방해 방지대책 마련
- 3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현황 및 진단

가명조서 작성 이후 피해자 신원정보가 노출되는 사례 발생으로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 피해자가 실명으로 고소 후에 가명사용을 요청하여 가명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전의 고소장에 대해서는 가명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신원정보가 노출되는 사례 발생
- 현재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는 피해자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만 규율하고 있을 뿐임.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은 각자 전자적 사건관리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각각 훈령 등으로 ‘각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가명사건에서 피해자신원관리카드의 작성·관리 이외의 사건관리와 관련하여 일부사항의 경우(예컨대 ‘각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실명을 입력해야 하는지의 문제 등) 경찰 및 검찰 간에 처리방식 등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경찰·검찰 간에 피해자신원 기재·입력 관련 변경사항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음

민사절차에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 부분과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때 신원을 익명화하는 제도가 도입(2016년)되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법원에서 소액의 사기사건을 중심으로 배상명령을 인용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명령 청구를 통해서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명령 청구 시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익명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신원정보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신원정보 노출 우려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사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신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진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재피해 및 보복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2019년) 되었으나,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 수 없고,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면서 열람을 제한한 주소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완료되어도 발급이 가능하여 피해자 신원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수사 및 언론기관의 피해자 정보보호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 마련 필요성

- 제3차 기본계획의 이행 기간 중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 하였으나, 주된 제·개정 사항은 피의사건공개(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것이었음. 또한, 언론기관을 위해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아동학대사건보도 권고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좀 더 실무에서 활용가능도가 높은 업무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임

대중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부족 및 법집행기관의 처벌의지 부족

-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언론사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고, 대중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신원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행위에 대해 처벌한 사례가 없음
- 대중매체 등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된 경우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원정보 공개 시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내용으로 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현황 및 진단

언론보도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 필요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에서 “가정보호사건” 또는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하여 언론사 관계자의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사건에 형사사건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입법적 오류이므로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중 형사사건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해당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누구든지” 피해자신원정보를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일반인이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신원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신원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대량전달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은 크므로 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신원정보를 방송, 정보통신망 등 대량전달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 있음
-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신원정보를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행위주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즉,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피해자신원정보공개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신원정보를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경우 행위주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반해,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경우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이 보도·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음. 성폭력범죄와 비교할 때, 가정폭력·아동학대에서 언론사 관계자의 보도·방송을 통한 피해자정보공개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기에 적절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진단

신원정보가 공개된 피해자의 지원방안 미비

-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규정 없음. 동 법률 제44조의7에 나열된 일정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그러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제44조의7 제1항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신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가 ‘불법정보 유통행위’로 나열되어 있지 않음.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제1항을 개정하여 ‘현행법상 형사처벌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피해자신원정보도 불법정보로 나열하고, 그러한 정보의 삭제요청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 또는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이 가능한 일정 기관·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이러한 기관의 발굴 등을 위해 ‘언론보도·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신원공개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언론보도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신원정보가 공개된 경우 정정보도 청구 또는 삭제요청 외에 그나마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민사배상임.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및 피해자 보호·지원단체가 피해자의 민사배상소송 진행 또는 중재·조정제도 진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민사배상소송 진행의 경우 소송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세부 과제

- 4-1-① 형사절차 이외 분야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정책의 확대
- 4-1-②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 4-1-③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4-1-① 형사절차 이외 분야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정책의 확대

- 민사 손해배상절차에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후속 조치 마련 (법원행정처)
 -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절차에서 손해배상소송 소장, 준비서면 부분 및 판결서 송달 시에 피해자 신원이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민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민사전자시스템 개선
 - * 민사소송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규정을 도입하여, 당사자가 소송기록 중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법원행정처)
 - 친권자인 가해자가 임의로 자녀를 전입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21. 7. 20. 개정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방안 마련

4-1-②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시 처벌규정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 수사기관·언론기관·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를 위한 사례중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업무매뉴얼 마련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피해자 정보공개 관련 민사판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사례 및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조정 사례, 수사기관의 자체 징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보공개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등 추출
 - 형사처벌 및 행정적·민사적 제재를 받는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 내지 업무매뉴얼 마련 검토
- 언론사와 플랫폼의 자율적 예방조치 확대 및 협력 증진방안 모색 (방송통신위원회)
 -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안내·홍보 방안 마련
 - '성범죄 기사'에서의 댓글창 기능 삭제와 같은 언론·플랫폼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조치 모색

4-1-③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 (법무부, 여성가족부)
 -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도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대상 범죄 및 처벌대상인 행위주체 확대 검토
 - 범죄에 따라 상이한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및 개선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원정보가 공개된 피해자의 지원방안 마련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행위를 모니터링하여, 형사고발, 행정제재 신청,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검토
 -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민사소송경비 지원 검토

4-2.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현황 및 진단

다양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법률의 정리 필요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신변보호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외에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등으로 다양함. 각 개별 법률은 대상 범죄, 신변보호의 목적 및 대상(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 신변보호조치의 내용 등이 달라 정합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며, 통일적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 실무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대상자 제한이 없는 신변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나 일반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에 관한 법률 현황

- 범죄피해자보호법
-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접근금지명령 대상의 확대 필요성

-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으로서 접근금지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통해 재피해 혹은 보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며, 최근 법 개정으로 가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음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동법상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부과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동법상의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미이행은 동법 제정시부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부과)

※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동법상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잠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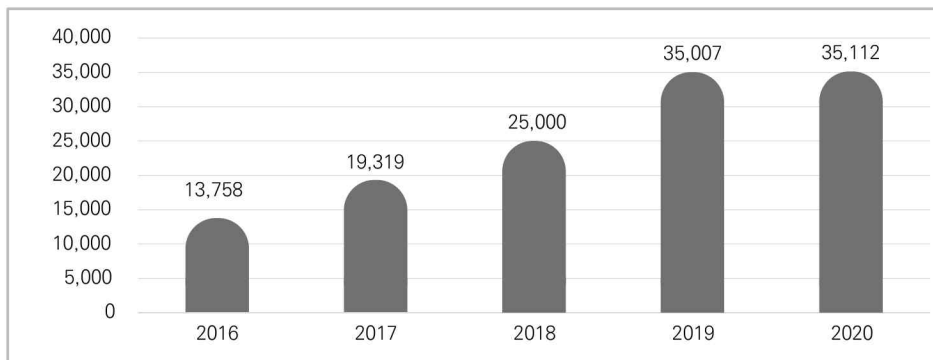
현황 및 진단

- 그러나 현재 접근금지명령제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이외의 범죄유형의 피해자 중 재피해나 보복의 우려 때문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자비를 들어 민사상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있음. 향후 접근금지명령제도를 재피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강력범죄의 가해자에게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경찰 제공 신변보호조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

- 최근 법률상 신변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증가 경향,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제도의 정착,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정서적 불안을 조성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 요청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경찰에서 신변보호조치를 받는 인원수와 조치건수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상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는 형태의 법령(예 :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경찰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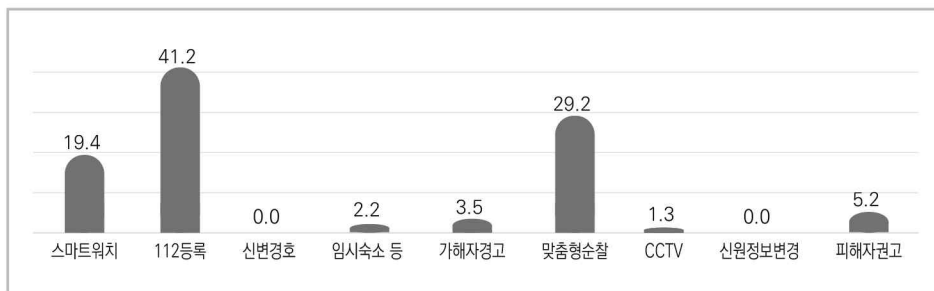


현황 및 진단

- 현재 경찰에서의 신변보호조치는 112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음. 범죄피해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신변보호조치는 스마트워치, 112 등록, 신변경호의 순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의 욕구는 높으나, 실제 경찰에서 제공되는 빈도가 가장 낮은 신변보호조치는 '신변경호'였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욕구와 실제 제공되는 조치와의 큰 격차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가운데 신변보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변보호 업무 전담 인력 충원이 없어 신변보호 조치 중 가장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신변경호는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제공해주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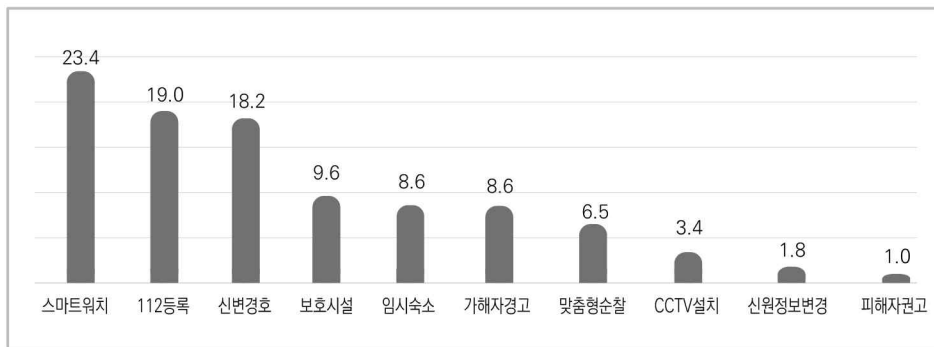
※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유형별 비율

(단위 : %)



※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신변보호조치

(단위 : %)



자료출처 : 이재영, 김연수(2020), 범죄피해자의 경찰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1), p. 275

현황 및 진단

- 또한, 신변보호의 중요성에 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신변보호 관련 예산 배정은 매우 작아 스마트워치나 CCTV 구입, 임시숙소비 지원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신변보호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의 위치추적 능력 향상, CCTV 화상도 개선, 임시숙소의 안전성 개선과 같은 신변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범죄피해보호기금 중 경찰청 신변보호사업 예산 현황 (연평균 13% 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경찰청 예산	1,295	1,321	1,664

세부 과제

- 4-2-①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 4-2-②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4-2-①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 신변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방안 연구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여러 법령(범죄신고자법,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특별법상 신변보호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검토
- 접근금지명령 대상 확대 방안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임시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을 확인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접근금지명령을 가해자의 재피해 및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신변보호조치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형사사법절차 단계별 신변보호조치를 수사·공판·집행에 이르기까지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 신변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4-2-②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 형사절차 내 신변보호조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형사사법절차 내 효과적·지속적인 신변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변보호조치 고도화 및 증가된 신변보호조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확보 (대검찰청, 경찰청)
 - 실질적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현황 및 진단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수사단계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이나 매뉴얼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피해자 조사가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관건임. 이에 경찰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피해자보호관과 검찰의 인권감독관이 2차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걸러진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일선의 담당자에게 환류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2차피해를 야기하는 언행을 사후통제 내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사기관 2차피해 예방 관련 법규

-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51조(2차피해 방지)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3조 제2호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방지(제20조 내지 제27조)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80조(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

- 성폭력피해자는 법원뿐만 아니라 배심원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거나 진술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어서 그 자체를 2차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국민참여재판 개시 시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도록 개정되었으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6. 3. 16. 선고 2015도2898 결정). 실제 법원의 재량으로 명시적인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개시하거나 공개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개시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진단

- 현재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처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으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 측 변호인 또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변호사의 경우 그 같은 교육을 받을 계기나 유인이 없음. 「변호사법」 제85조가 법정 의무로 정하고 있는 전문연수 및 윤리연수에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사절차상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교육·연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 증인신문 시 신문내용 제한을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시 주로 가해자 측 변호인에 의한 반대신문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 이력을 거론하고 인격적인 비난을 하는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만, 부적절한 신문내용은 법관의 소송지휘권의 재량적 행사에 의존하여 제한할 수 있을 뿐임. 성범죄 피해자 증인 보호를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관이 이를 충분히 주지하며, 법관 간 또는 법원 간 경험 및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아가 법관의 재량적 소송지휘권 행사만으로는 부적절한 신문내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장을 위해 성 이력 등 부적절한 신문에 의한 피해자 진술의 증거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 방해에 대한 조치 필요성

- 최근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보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공갈, 협박, 위증,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남용이 문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에서 겪는 형사절차 외에 역고소가 제기된 사건의 피의자라는 또 다른 지위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며, 자신의 무혐의나 무죄에 이른다 하더라도 적시에 성범죄 피해회복에 힘쓸 기회나 자원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음. 무고죄 등 역고소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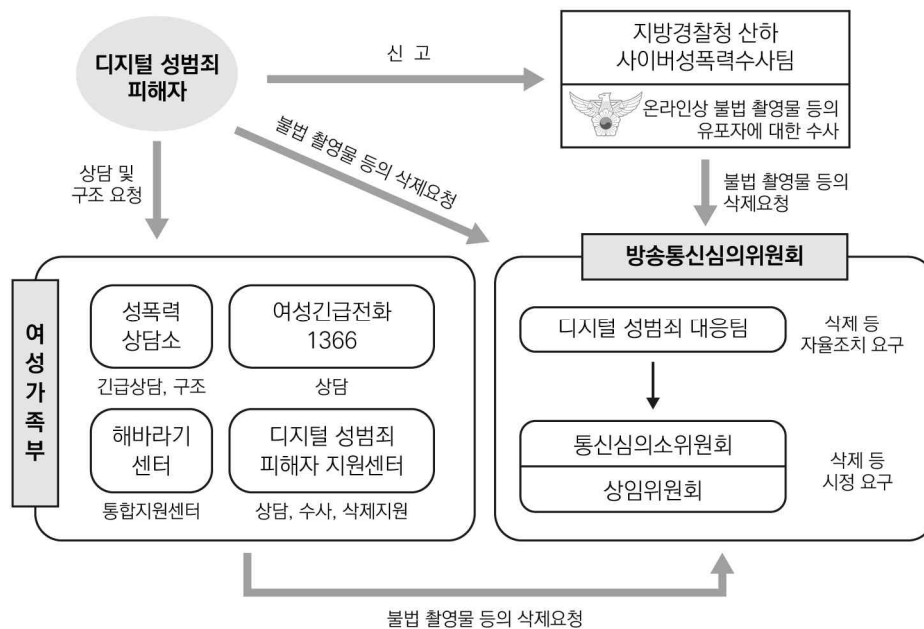
현황 및 진단

- '18년 법무부·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을 통해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검찰청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이고, 이후에도 역고소 남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대한 일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역고소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상향 입법 검토 필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2차피해 맞춤형 지원 필요성

- 2017년 9월 26일 14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수사, 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보호·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디지털성범죄심 의지원단'을 신설·운영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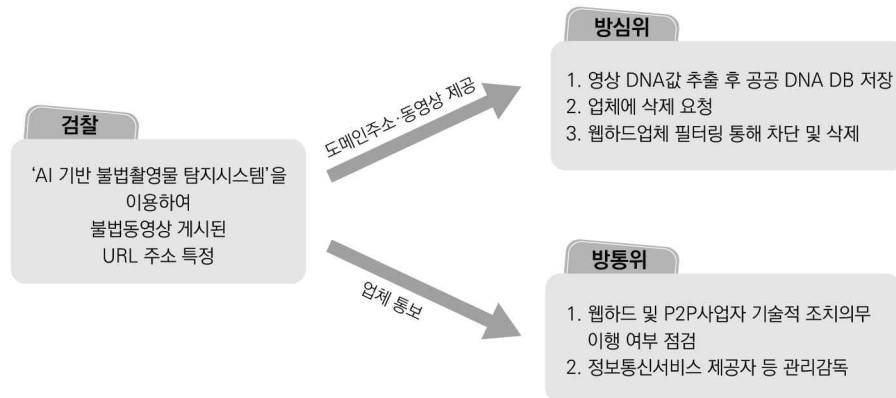


자료출처 : 조주은·최진웅(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면.

현황 및 진단

- 대검찰청에서도 2020.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대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흐름도



현황 및 진단

- 위와 같은 대응책마련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연 및 지속적 관리 여력 부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인력 및 홍보비 등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원, 피해자 지원체계의 분산 및 기관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원화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사 없이 또는 수사와 동시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 욕구를 적확하게 반영하고, 수사 및 불법촬영물 등 삭제 처리의 신속성·전문성,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2차피해 예방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세부 과제

- 4-3-①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 4-3-②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 방해 방지대책 마련
- 4-3-③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4-3-①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시 2차피해 관련 법규와 매뉴얼 준수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조사 시 관련 법규, 매뉴얼 등 준수 여부에 대한 인권보호관(검찰청) 및 피해자보호관(경찰청)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증인신문 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방안 마련 (법원행정처)
 - 성 이력 등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는 등 법관 대상 증인신문 매뉴얼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연수 내실화
- 형사절차상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변호사 교육·연수 마련 및 제공 (법무부, 대검찰청)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대상 전문연수 및 윤리연수에 여성폭력 또는 성인지감수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변호사 대상 교육·연수 강화
- 국민참여재판 개시 및 증인신문 시 피해자 의사 존중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국민참여재판 개시 및 증인 출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법원의 결정 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안 검토

4-3-②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방해 방지대책 마련

- 수사·재판단계에서 역고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경찰청)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 또는 법원의 일정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역고소 사건의 수사를 유예하는 등 역고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 역고소 사건에 대해 원사건을 담당한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 효율적인 법적 대응과 역고소로 야기되는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피해자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4-3-③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차단·삭제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 신속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차단·삭제 및 처리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분산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 가해자 수사,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 민관협력, 국제공조 등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실효성 제고
-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성인과 달리 특화된 대응체계 구축 필요

5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1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 3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 지원 영역의 발전 모색

5-2. 정책기반 강화

- 1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2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 3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현황 및 진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관련 중앙부처의 다원화에 따른 협력적 연계의 필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성폭력·가정폭력, 일반 강력범죄,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유형과 경찰·검찰·법원·형집행기관 등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다양한 정책추진 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부처 간 중복사업의 조정과 역할분담체계 수립, 협력적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관련 정부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연 1회 위원회 개최 등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각 부처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함.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편,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 군경찰, 해양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 등이 참여부처에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어디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하였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범죄피해자는 존엄에 부합하는 보호·지원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형사사법기관들도 참여부처로 지정하여 업무와 조직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개발·시행 필요

통합적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 피해유형별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와 각 부처 소관 시설들이 각자 독자적인 지원사업을 개발·제공하면서 각 부처 소관 시설 간 그리고 동일 부처 내 시설 간 지원영역의 중복 및 불필요한 경쟁, 상이한 지원 절차로 인한 지원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할 총괄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피해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또한 시급히 요청됨

현황 및 진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추진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증진 필요

-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한축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 직후부터 일상의 평온한 삶으로 복귀하기까지 장기에 걸쳐 범죄피해자는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간의 복합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긴밀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시행될 필요가 있음. 실효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협력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와 피해자지원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평가 과정에서 참여 미흡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은 범죄피해자의 관점과 욕구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피해자지원기관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이미 범죄피해와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하여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도가 높은 민간 피해자지원기관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수립과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세부 과제

- 5-1-①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5-1-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 5-1-③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 지원 영역의 발전 모색

5-1-①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대검찰청, 경찰청)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참여 부처의 실무 담당자간 범죄피해자 정책관련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정례 협의체 마련 및 협조 체계 강화
 - 각 부처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의견대립 시 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권한 실질화 방안 검토

- 범죄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와 표준화된 지원 프로토콜 마련
 - 범죄피해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 서비스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5-1-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범죄피해자 지원 협력 방안 검토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자 대상 교육 관련 자료 공유,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전문성 제고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굴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 발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적 협력 방안 검토

5-1-③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 지원 영역의 발전 모색

- 범죄피해자와 민간피해자지원기관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방안 검토 (법무부)
 - 범죄피해자, 민간 피해자지원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창구 마련 검토 (법무부)
 - 연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결과 및 차년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민간 피해자지원기관 발전방안 연구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법무부)
 - 민간 피해자지원기관에 대한 미시적·거시적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서의 민간 기구의 다양한 지원 역할 모델 개발
 - 민간 피해자지원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행정적·인력적 지원 확대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

현황 및 진단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 평가 미흡

- 기본계획 수립 후 법무부에서는 관련 중앙행정부처와 시도로부터 당해 연도 시행계획의 이행성과와 차년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종합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이행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작업이 부족함. 이에 따라 전년도 정책시행에 부족한 부분이나 정책시행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필요 있음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관련 통계 및 경험적 자료의 부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 피해실태의 추이, 정책환경의 변화, 정책수요자의 욕구 등에 부응하여 적절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과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실증적인 평가연구를 통해 집행과정 등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러나 범죄피해자 관련 행정통계가 제대로 생산, 집계, 공표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실태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민간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체계적 보수교육 제공 및 근무조건 개선 필요성

-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민간 피해자지원 기관 종사자의 높은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됨. 이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민간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의 증가와 다양한 정책 개발·수립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임금은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수준으로 열악해 이직이 잦고,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은 전문성을 가진 신규 인력들의 피해자지원 분야로의 진입을 막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민간 피해자지원기관별로 평균 상근직원 수, 보수 등 근무조건이 차이가 큰 것도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문적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 등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황 및 진단

※ 기관별 평균 상근인력의 변화

- 1366센터 : '15년 14.1명 → '18년 16.2명
- 성폭력피해 상담소 : '15년 3.1명 → '19년 3.7명
-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 '15년 5.0명 → '19년 6.0명
-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 '15년 3.1명 → '19년 4.2명
-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 '15년 3.9명 → '19년 5.5명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년 2.3명→'20년 2.4명

범죄피해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 양성의 필요성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종사자나 민간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이외에 신체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응급구조사에서 중장기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직의 서비스를 필요로 함. 그러나 이들 전문직분야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특화된 전문가는 많지 않은 실정임. 각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해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세부 과제

- 5-2-①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5-2-②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 5-2-③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5-2-①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범죄피해자 관련 주요 행정통계의 생산, 산출 및 공표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주요 행정통계* 선정 및 분석
 - * 행정통계 중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는 제외
 - － 범죄 유형 별* 세부 통계 산출 및 성별 분리통계 생산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진
 -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등 사건 특성 반영

- 범죄피해자 관련 지속적 연구 실시 (법무부)
 - 범죄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지원 현황, 피해자지원 기관의 운영 실태 및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지속적 실시

5-2-②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법무부)
 -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질적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실효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 기본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법무부)
 - 기본계획 상 각 기관별 정책 진행 상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2-③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범죄피해 보호지원 민간 종사자 양성·육성체계 마련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범죄피해 보호지원 민간 종사자 양성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전문화 방안 마련
 - 범죄유형별·피해회복 단계별 전문화된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제공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범죄피해자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 신입검사 교육 등 법조인 교육과정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교육 실시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종사자의 역량 강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주기적 교육 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 검토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현실적 보조금 지급 및 행정 지원 등 간접적 지원 방안 검토

VI. 제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추진 부처



VI. 제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추진 부처

추진과제	소관부처
1-1.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1-1-①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다양한 응급위기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1-1-②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 사건현장 출동 경찰 대상 체계적 응급위기 지원 교육 시행	경찰청
• 응급위기 지원 경비의 신속한 집행체계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응급위기 지원 시 전문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비상 연락 체계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1-2-①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 의료복지 소외 지역의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확보 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1-2-②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 자립·자활 지원 방안 마련	법무부, 고용노동부
• 피해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대상 확대	법무부, 여성가족부
1-2-③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강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법무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1-3.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1-3-①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 범죄피해구조금액의 순차적 상향	법무부
• 구조금 이외 경제적 지원 금액의 순차적 상향	법무부, 대검찰청
1-3-②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대상 확대	
•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의 단계적 확대	법무부
• 구조금 이외 경제적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법무부, 대검찰청
1-3-③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경제적지원(구조금)의 집행 체계 개선	
•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속도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심의기구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2-1.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2-1-① 형사조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대검찰청
• 형사조정 진행 방식의 다양화	대검찰청
•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대검찰청
2-1-②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경찰단계 사건을 검찰청 소속 형사조정위원에게 의뢰하는 방식 등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	대검찰청, 경찰청
• 형사조정대상 범죄 확대 및 관련 규정 개정	대검찰청
2-2.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2-2-①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범죄피해자의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및 방식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성폭력범죄의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법무부, 법원행정처
•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사건에 대한 현황 확인 및 개선방안 강구	법무부, 법원행정처

추진과제		소관부처
2-2-②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홍보 및 안내 강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운영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법무부, 법원행정처
3-1.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3-1-①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 피해자 권리고지 및 보호·지원제도 운영의 실질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형사절차 관련 정보 통지의 적시성 확보 및 내용 표준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서비스 기능 및 대상 확대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 가명조서 작성 후 관리체계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3-1-②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열람·복사권 확대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검토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3-1-③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 소년보호사건 심리 관련 정보에 대한 피해자 통지 추진		법원행정처
•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제한적 허용		법원행정처
3-2.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3-2-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법무부
• 피해자변호사 공판절차상 권한 강화		법원행정처, 법무부
3-2-②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 진술조력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법무부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기관 다양화 및 처우개선		법무부
•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 및 진술조력을 위한 수사 환경 구축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추진과제	소관부처
3-2-③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정부부처, 민간단체,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법무부
3-3.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3-3-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법무부, 대검찰청
• 공판절차 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3-3-②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 범죄피해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형사절차 전반에서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및 제도화 방안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4-1-① 형사절차 이외 분야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정책의 확대	
• 민사 손해배상절차에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후속 조치 마련	법원행정처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법원행정처
4-1-②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 수사기관·언론기관·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를 위한 사례중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업무매뉴얼 마련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언론사와 플랫폼의 자율적 예방조치 확대 및 협력 증진방안 모색	방송통신위원회
4-1-③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	법무부, 여성가족부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원정보가 공개된 피해자의 지원방안 마련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추진과제	소관부처
4-2.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4-2-①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 신변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방안 연구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접근금지명령 대상 확대 방안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신변보호조치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4-2-②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 형사절차 내 신변보호조치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확보	대검찰청, 경찰청
4-3.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4-3-①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시 2차피해 관련 법규와 매뉴얼 준수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 증인신문 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방안 마련	법원행정처
• 형사절차상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변호사 교육·연수 마련 및 제공	법무부, 대검찰청
• 국민참여재판 개시 및 증인신문 시 피해자 의사 존중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4-3-②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방해 방지대책 마련	
• 수사·재판단계에서 역고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경찰청
• 역고소 사건에 대해 원사건을 담당한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4-3-③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차단·삭제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분산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추진과제	소관부처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5-1-①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대검찰청, 경찰청
• 범죄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5-1-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범죄피해자 지원 협력 방안 검토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굴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5-1-③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 지원 영역의 발전 모색	
• 범죄피해자와 민간피해자지원기관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방안 검토	법무부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창구 마련 검토	법무부
• 민간 피해자지원기관 발전방안 연구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법무부
5-2. 정책기반 강화	
5-2-①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범죄피해자 관련 주요 행정통계의 생산, 산출 및 공표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 범죄피해자 관련 지속적 연구 실시	법무부
5-2-②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법무부
• 기본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법무부
5-2-③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범죄피해 보호지원 민간 종사자 양성·육성체계 마련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제공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종사자의 역량 강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인쇄일 : 2021년 9월 30일

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연락처 : T. 02.2110.3263 F. 02.2110.0354

디자인·인쇄 :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